

# 전주매일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음 11월 6일) 제21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쟁점 - ①개발 절차 정당성부터 확보를

# ‘대한방직 부지’ 절차 무시 ‘마이웨이’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143층 타워와 아파트 단지 등을 복합 개발하려는 계획에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각종 특혜, 사업 추진에 강한 의문과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쟁점사항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 4월 자광이 공개한 430m 높이 전주타워 조감도.

〈사진=자광 제공〉

- 글 쓰는 순서
- 개발 절차 정당성부터 확보를
  - 불거지는 특혜 논란
  - 인터뷰 - (주)자광

▲현재 상황은?... 난맥 '수두룩' 사업 주체인 (주)자광은 지난 10월 18일 대한방직 부지 23만565㎡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부지엔 전북도유지 6,228㎡와 전주시유지 7,873㎡가 포함돼 있다. 자광측은 이 가운데 도유지에 대해 오는 2020년 10월24일까지 사용하겠다는 대부계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도는 자광이 신청한 공유재산 사용목적이 '기타용'으로 돼 있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용목적은 현재 '공공용도(용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계약서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목적 변경 시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데 따른 도의 조치다.

민약 발생할지 모를 분쟁소송이 진행될 경우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행정 집행 주체인 전주시 고민은 더욱 깊다.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대부계약 신청했으나 반려**

**도시기본계획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 절차부터 진행 전주시에 지구단위계획안 구역 지정 등 제출했으나 국토계획법령에 부합안돼 계획안 자광에 되돌려져 전주시 입장은 '시큰둥'**

5월31일 기준 해당 부지 공시지가는 1㎡당 66만5,200원이다. 만약 이 부지가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밟지 않고 상업용으로 바뀔 경우 땅 값은 수 백만 원으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된다.

시가 특혜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머리를 싸벌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시큰둥한 행정, "절차부터 차근차근..."

행정 은 절차다. 공정·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 주체인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광측이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단계를 넘어 지구단위계획 절차부터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 소리다.

실제 자광은 지난달 12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2025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돼 있는 대한방직 부지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관련 계획안을 자광에 되돌려 보냈다.

관련 계획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토 계획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됐다"면서 "이달 중 전북도 승인 신청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절차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절차를 통과하려면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고민형 기자

## “전주, 특례시 지정해야”

시·시의회, 이행 촉구·활동방향 발표

“기준을 단순 인구에서 바뀔 수 있도록 앞장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 총력 다 할 것” 약속

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전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4면)

특례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던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에서 대폭적인 자치권이양 등을 요구하면서 추진되었는데,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만이 특례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례시 지정에서 소외하게 될 전주시를 비롯한 청주시, 성남시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례시 지정은 일본의 지정시(指定市)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도입 배경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사회복지, 보건위생, 건축,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을 거치는 2중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청원 등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

이들은, △100만이상으로 입법예고 중인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지 않고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것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과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부지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누락되었던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전주시와 전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전북 참예우 6년 연속 '국가 명품' 인증

전북 한우광역브랜드인 '참예우'가 6년 연속 명품브랜드라는金字를 쌓았다.

도는 1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8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전북한우광역브랜드 '참예우'가 6년 연속 명품브랜드로 인증 받아 '국가명품인증서'를 수

여받았다고 밝혔다. '참예우'는 전북 한우 대표 브랜드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국가명품'으로 인증받으면서 전북을 넘어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의정활동으로

**부안군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부안군의의회**